

제 308 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'22.6.14.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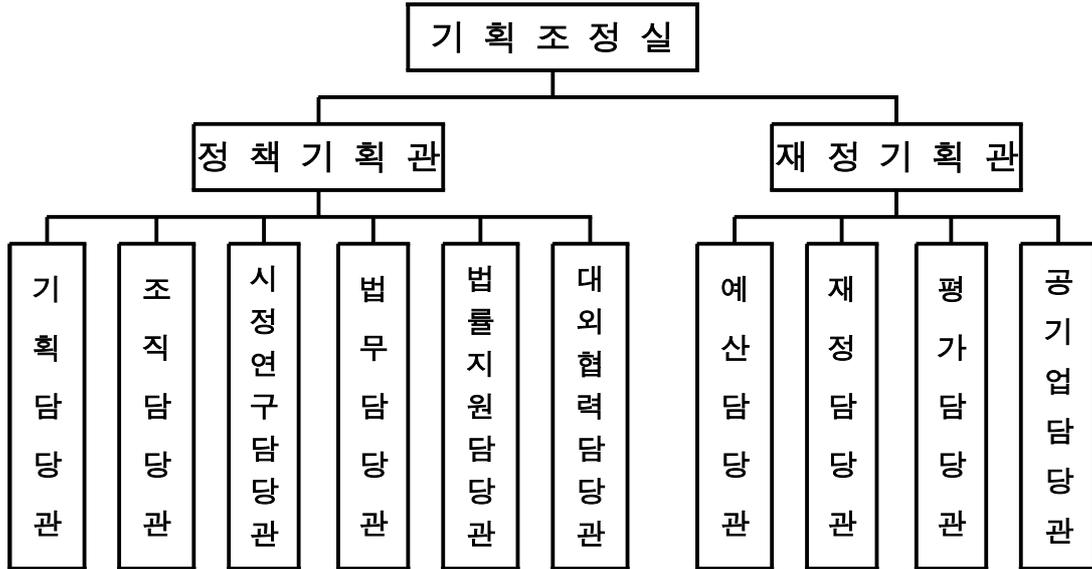
주요 현안보고

2022. 6.

기획조정실

I. 일반 현황

조 직 1실, 2관, 10담당관, 45팀, 1직속기관 · 1출연기관



- 직속기관 : 시립대학교(6처 8대학 10대학원)
- 출연기관 : 서울연구원(1본부 8실 2센터)

인 력 272명/255명(정원/현원)

(’22. 5. 23.)

구 분	합 계	일반직	임기제	관리운영직
계	272 / 255 (150)	231 / 226	35 / 24	6 / 5
기 획 담 당 관	37 / 36 (15)	29 / 31	6 / 4	2 / 1
조 직 담 당 관	32 / 31 (19)	31 / 30	- / -	1 / 1
시정연구담당관	14 / 15 (10)	14 / 14	- / 1	- / -
법 무 담 당 관	26 / 22 (14)	22 / 20	3 / 1	1 / 1
법률지원담당관	30 / 25 (15)	12 / 10	18 / 14	- / 1
대외협력담당관	17 / 16 (8)	14 / 15	3 / 1	- / -
예 산 담 당 관	40 / 40 (23)	38 / 38	1 / 1	1 / 1
재 정 담 당 관	22 / 21 (14)	21 / 20	1 / 1	- / -
평 가 담 당 관	33 / 29 (18)	31 / 29	1 / -	1 / -
공 기 업 담 당 관	21 / 20 (14)	19 / 19	2 / 1	- / -

※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

주요기능

구 분	담 당 업 무
기 획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 업무계획 수립, 시정 현안사항 기획·조정 ○ 시의회 관련 업무, 국정감사 수감 총괄, 공약 총괄 관리 ○ 시정백서·현황 작성,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
조 직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 및 정원관리,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○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○ 사무이양·위임,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
시정연구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연구, 직무발명,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○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·지원 등
법 무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, 납세자 보호업무 ○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,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
법률지원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소송 수행, 법률자문, 계약서 및 위·수탁 협약서 심사 ○ 대시민 법률상담,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
대외협력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-지역 상생발전 추진,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○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, 국회·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
예 산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, 예산집행 관리 총괄 ○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
재 정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市·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, 기금운용 총괄 ○ 재정투자심사, 지방보조금·국고보조금 총괄 등
평 가 담 당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주요사업·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○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
공기업 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·출연기관 설립·지원, 경영평가, 재정 모니터링 ○ 투자·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

예산 총 규모 : 2조 6,432억원

○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5.31.)

구분	2021년 본예산(사업수)	2022년(사업수)	증감
합계	1,455,036 (51)	2,643,239 (47)	1,188,203
일반회계	563,318 (42)	644,528 (38)	81,210
특별회계	170,628 (-)	243,279 (-)	72,651
기금	721,090 (9)	1,755,432 (9)	1,034,342

○ 일반회계 : 총 6,445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5.31.)

구분	2021년 본예산(사업수)	2022년(사업수)	증감
합계	563,318 (42)	644,528 (38)	81,210
기획담당관	1,047 (2)	1,152 (2)	105
조직담당관	101,929 (12)	1,265 (3)	-100,664
시정연구담당관	- (-)	112,205 (8)	112,205
법무담당관	1,050 (3)	697 (3)	-353
법률지원담당관	7,596 (2)	7,766 (2)	170
대외협력담당관	1,721 (3)	1,644 (3)	-77
예산담당관	254,669 (3)	298,621 (3)	43,952
재정담당관	192,062 (9)	218,252 (6)	26,190
평가담당관	2,206 (4)	2,131 (4)	-75
공기업담당관	1,038 (4)	795 (4)	-243

○ 특별회계 : 총 2,433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5.31.)

구분	2021년 본예산(사업수)	2022년(사업수)	증감
예산담당관	170,628 (-)	243,279 (-)	72,651

○ 기금 : 총 1조 7,554억원

(단위 : 백만원 / 기준일 : '22.5.31.)

구분	2021년 본예산(사업수)	2022년(사업수)	증감
합계	721,090 (9)	1,755,432 (9)	1,034,342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	552,254 (-)	1,224,408 (-)	672,154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164,575 (-)	526,887 (-)	362,312
대외협력기금(국내계정)	4,261 (9)	4,137 (9)	-124

※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

II. 정책 목표

시민의 삶을 회복하고, 도시경쟁력을 강화

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

①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③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·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

④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III.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

1.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- ① 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- ②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- ③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- ④ 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
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- ①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- 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- ③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- ④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3.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·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

- ①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
- ②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
- ③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4.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- ①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- ②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
- ③ 투자 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

1. 안정적인 시정 성과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

① 시정 맞춤형 학습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
②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
③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
④ 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
1

시정 맞춤형 학술용역 수행 지원 및 관리

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

□ 추진방향

-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
-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방지와 공개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철저 운영 및 조례개정
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연구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연구역량 적극 활용

□ 추진내용

- 학술용역심의회 **안정적 운영** : 심의회 개최 2회, 심의안건 17건
- 학술용역 운영개선을 통한 학술용역 관리 강화
 - 학술용역 공개 및 진행상황 점검등을 위한 모니터 정례화 : 주 1회
 - ▶ 학술용역관리시스템,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, 프리즘 등 모니터
 -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증(Copy Killer) : 17건 검증 결과 표절률 10% 이하
-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정책연구용역공개 조례 등 개정
 - 심의안건 제출시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의무 명문화
 -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‘지체없이’ 로 명문화
- **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** 및 서울연구원 등 내부 위탁연구 활성화
 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과제 지원 확대
 - ▶ 과제선정 심의 : 연 1회 ➔ 수시, 지원예산 확대 : 최대 10,000천원 지원 등
 - 서울연구원 등 위탁연구를 위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(SeTTA) 회의 : 2회

□ 향후계획

- 수시 및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: '22. 6월 ~
 -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 및 위탁 학술용역 심의
- 학술용역 최종평가 및 모니터 결과 보고 : '22. 12월

2

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

미래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정영향을 예측·분석하고,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인구 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**인구변화 대응 전략 도출**
-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**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**

□ 추진내용

-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**인구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**
 - 인구변화 요인 분석을 통한 市 인구변화 특성 및 미래 시정방향 도출
- **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**을 위한 ‘**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**’ 구성·운영
 - 전문가 발제·토론 통해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논의(월 1회)

【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현황(총 4회 운영)】

- 1차 회의('21.12.13.) : 인구변화대응 TF 역할·운영 방향, **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**
- 2차 회의('22. 3.16.) : 인구변화대응 방향·범위, **인구·사회 정책 분야 전략과제 논의**
- 3차 회의('22. 4.21.) : **경제·노동 정책 분야**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
- 4차 회의('22. 5.20.) : **저출산 및 가족정책 분야** 대응 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

-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**인구영향평가 도입**
 - 인구영향평가 대상·절차·범위·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추진

□ 향후계획

- 인구변화 대응 계획 수립 위한 실본부국 TF 구성·운영 : '22.7월 ~ 9월
- 인구변화 관련 시민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: '22. 9월 ~ 10월
-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(5개년) 마련 : '22. 하반기
-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: '22. 8월 ~ 12월

3

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

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(기조실)와 평가지수 분석·연구(서울연) 기능 간 협업
- 분야별 전문가 중심 글로벌 도시경쟁력 이슈 및 정책 논의 네트워크 구축
-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 지표 및 시정성과 체계적 관리

□ 추진내용

-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지수별 서울시 평가 현황 및 강약점 분석
 - 서울연구원을 통한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 체계적 관리
 - 서울의 도시경쟁력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('21.4.)
- 市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분야별 지표 추출 및 데이터 갱신
 - 市에서 관리 가능한 분야별 지표 추출 ⇨ 관련 사업 목표 상시 이행 관리
 - 평가지표 관련 시정 통계 및 성과 자료의 영문 데이터 현행화
- 도시경쟁력 포럼 운영(분기별 1회)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논의
 - 市 연구기관(서울연, 기술연, 시립대)을 통해 외부 전문가 연계 도시경쟁력 이슈 분석 및 경쟁력 제고 자문 등

【도시경쟁력포럼 개최 현황(1회 운영)】

- 제1차 도시경쟁력포럼('22.5.3, 서울연 주관) :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
 - 제1세션(종합토론) : 서울시 도시경쟁력 진단 및 과제
 - 제2세션(분야별 토론) : 포스트 코로나 시대,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
 - ▶[1분과] 문화.관광 / [2분과] 외국인인재.FDI / [3분과] 경제(창업.기술혁신)

□ 향후계획

- 市 영문홈페이지 내 평가지표 관련 통계 데이터 현행화공개 : '22. 7월
- 제2차 도시경쟁력포럼 개최(서울시립대 주관 예정) : '22. 8월

4

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

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·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나가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저성장 등 뉴 노멀(New Normal) 시대 市 지속가능발전 과제 발굴
- 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으로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

□ 추진내용

- 이행계획 중간 점검 및 전문가 토론결과 반영,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
 -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세부사업 등 중감점검 결과('20년~'21년) 및 전문가 토론회('22.4.29. 개최) 종합토론 결과 활용하여 보고서 발간
- 시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
 - 행정계획 확정前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로 市 주요 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
 - ※ 올해 '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', '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' 등 6개 검토 예정
- 市·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및 협력
 - 희망 자치구 대상으로 교육, 보고서 발간 등 지원 및 협력 ('21년 5건 협력)
-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'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' 구성
 - 인재DB 활용, 유관협회 추천 및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 위촉(하반기)

□ 향후계획

-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: '22.6월
-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시행(6개 행정계획) : '22.6월~12월
-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및 협력 : '22.6월~12월
-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: '22.하반기

2.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

①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
② 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③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
④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1

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

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

□ 행정심판위원회 개요

- 심판위원: 정원 50명/현원 42명(외부 37명, 내부 5명)
- 회의운영: 연간 24회 개최(매월 2회)

행정심판 운영 실적 (’22.5.18.기준, 단위: 건)	접수건수	재결건수	인용	기각	각하
	351	313	49(16%)	191(61%)	73(23%)

□ 추진내용

-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를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
 - 사건 진행사항 수시 점검 및 처리 지연 사유 파악을 통한 안전 신속 처리
 - ※ 평균 재결기간 단축유지 : 105일(’20) → 75일(’21) → 78일(5.18.기준)
- 고난도 사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한 주심배정 비율 확대
 -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청구사건 증가로 주심배정 필요성 증대
 - ※ 최근 3년간 주심 배정 비율 : 36%(’20) → 56%(’21) → 58%(5.18.기준)
- 사회·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추진
 -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 확대(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가능)와 홍보 실시
 - ※ 국선대리인 신청/선임현황 : 16건/4건(25%)(’21) → 8건/7건(88%)(5.18.기준)

□ 향후계획

- 행정심판 사례전파 및 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한 재결레집 제작 : ’22. 11월

2

법령·제도 개선으로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

시민이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법령·제도상 불편사항을 발굴·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추진방향

- 시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법령·제도 발굴·개선
- 발굴·개선 내용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한 신속한 개선 추진

□ 추진내용

-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·제도 개선과제 발굴·건의
 - 주택, 복지 등 분야의 개선과제 51건 발굴, 대정부 및 국회 등 건의
 - ※ 민간 재개발·재건축 통합심의 규정 마련, 학대발생 아동복지시설 운영법인 명단 공표 등

'22년 상반기 주요 개선사례

- ▶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('22.1.) :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위원 수 확대(25명 이내 → 30명 이내)
- ▶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'22.2.) : 국공립으로 전환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정어린이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

○ 다양한 건의 창구를 활용한 개선과제 수용률 제고

- 국무·차관회의, 시·도지사협의회, 국회 등을 통해 주요 안건 개선 노력
- 국무조정실,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건의과제 회신 및 수용률 향상
 - ※ 최근 3년간 회신율 69.7%, 수용률 28.9%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 32.3%p, 11.3%p 향상('22.5월말)

□ 향후계획

- 하반기 법령·제도 등 개선과제 발굴·건의 : '22. 9월, 12월
-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집중 발굴·건의 : 수시

3

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

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
리스크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및 효율적인 시정 운영 적극 지원

□ 추진방향

- 체계적·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
-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를 통해 리스크 요인 감소

□ 추진내용

-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: '22년 총 1,045건 수행

구 분	수 행 건 수			판 결 확 정					진 행
	계	이 월	신 소	계	승 소	승소율(%)	패 소	기타	
2022. 4월	1,045	860	185	122	86	76.8	26	10	923
2021	1,273	699	574	413	292	75.5	95	26	860
2020	1,115	559	556	416	278	73.5	100	38	699

-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

- 시정현안*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적 자문 지원
 - *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 : 전담 TF 설치를 통한 신속한 법률대응체계 마련
- 관련실적 : '22. 4월 267건(내부자문 139건, 외부자문 128건)
 - *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실적 : '22. 4월 38건(내부자문 24건, 외부자문 14건)

- 주요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

- 우리 시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행·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·재무적 사전검토 수행
- MOU 사전점검용 매뉴얼(체크리스트) 개정('21. 3.) 및 분기별 배포
- 심사 실적 : '22. 4월 69건(민간투자 1건, 민간위탁 26건, 공유재산 및 임대차 등 42건)

□ 향후계획

- 소송수행 지속추진 및 소송사무규칙 개정(언론중재위 사건 수행근거 마련 등)
- 시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: 연중 상시

4

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

현행 법률상담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·추진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편의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·권익향상 도모

□ 추진방향

-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비
- 법률상담제도 인적 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책 효과성 증진
- 개선과제의 적극 발굴·방안 도출로 제도 운용의 선순환 체계 확보

□ 추진내용

- 법률상담서비스 상담방식 변경 및 유사 제도 간 통합 추진
 -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마을변호사·법무사 상담방식을 전화 상담에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으로 변경('22.5.23.)
 -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시민법률 상담실 폐지('22.7.1. 예정)로 서비스 중복문제 해소 및 운영 내실화 도모
- 공익변호사 풀(pool) 적정성 확보 및 마을변호사 활동 유공자 표창
 - 마을변호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총원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안정적·원활한 지원(공익변호사 총원 1,000명 유지)
 - 우수변호사(30명)에게 표창장 수여로 자긍심 고취를 통한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
- 법률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조사 실시
 - 만족도 주요 조사 항목(상담 신청 과정·이용 편의성·상담 및 응대) 구성 후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추진
 -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후 이를 운영방침에 반영

□ 향후계획

- 공익변호사 신규위촉 실시 : '22. 6월
- 시민법률상담실 폐지·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: '22. 7월
- 마을변호사 유공자 표창장 수여 : '22. 12월

3.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· 민간위탁 및 대외협력 추진

①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

② 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

③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1

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

지역주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「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('23~'25)」을 수립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(추진계획)
- 「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('20~'22)」

□ 추진방향

- 개정 지방자치법 등 달라진 지방분권 법·제도 반영
-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 우리 시 차원의 지방분권 정책 마련

□ 추진내용

- 「제1차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」 부서별 추진성과 분석 (5~6월)
 - 2019~2022년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소관부서별 30개 사업실적 점검
 - 부서별 자체평가와 조직담당관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
- 시의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실효적 개선과제 발굴 (6~9월)
 - 신규 과제 도출을 위한 서울시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수시 추진
 - 중앙의 달라진 지방분권 정책과제 검토, 지자체 중심 개선과제 반영
- 전문가 공론화와 시민숙의 과정을 통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(7~11월)
 -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
 - 시민체감 주제별 시민 여론조사·언론홍보, 주민자치주간 행사 추진

□ 향후계획

- 지방분권 신규 과제 부서별 협의 및 전문가 자문 : '22.6~9월
- 주민자치주간 행사 및 홍보 추진 : '22.10~11월
- 제2차 서울시 지방분권 종합계획 수립 : ~'22.12월

2

민간위탁 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

민간위탁 종사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기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 수행의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

□ 추진방향

- 채용 관련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침 적용의 실효성 확보
- 채용 단계별 업무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인사(채용) 문화 정착

□ 추진내용

-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**신규채용 관련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비**
 -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나, 기관장·관리인력 등을 사전 제안하는 경우 주관부서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 허용
 - 법인 임원 등의 자신의 가족 채용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신설
 -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참여제한 사유(제척·기피·회피)를 구체화
- **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 마련 및 시행**
 - 채용단계를 ① 공고 및 원서접수 ② 서류전형 ③ 면접시험 ④ 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⑤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단계별 업무 기준 제시
 -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실시로 업무 기준의 자율 준수 유도
- 인사·노무 분야 **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의무교육 지정**
 - 채용단계별 업무기준을 포함한 인사노무 분야 교육 프로그램 제작
 - 인재개발원 및 평생학습포털 내 온라인 강좌 게시, 수탁기관 의무교육 지정

□ 향후계획

- **관련 전문가 등 의견청취(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)** : '22.6월
※ 외부 전문가·수탁기관·주관부서 등 참여, 지침 개정안 및 채용업무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
- **민간위탁기관 채용업무 기준 시행** : '22.7월
- **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** : '22.8월~12월

3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
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-서울간 상생 공동체 조성 및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도모

□ 추진방향

- 정부·지자체 및 주요 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, 시정성과 극대화
- 현안과제 해결, 불합리한 제도·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 강구

□ 추진내용

- 지방분권 실현 등 국정과제 반영 위한 대통령 당선안·사도지사 간담회 참여(4.6.)
 -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 강화를 위한 시도 공통과제 제안
 -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안 과제 추진현황 지속 점검 및 추진 요구
- 시도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협 정책 워크숍 개최(4.20.)
 - 우리시 제안으로 시도협과 협력하여 개최,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
 - 시도별 애로사항 공유, 전문가 자문 등 정책 벤치마킹 및 개선점 발굴
-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 공동 대응 방안 마련
 -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비 80%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(3.17.)
 -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개선 필요과제 적극 발굴 및 시도협 건의(총 13건)

□ 향후계획

-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: '22.7~8월 중
-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: '22년 하반기

4. 효율적인 예산·재정 관리체계 확립

①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
②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

③ 투자 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

1 주요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

확정된 예산·기금 등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고,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

□ 추진현황

- 대상 : 시설비, 연구용역비, 민간위탁금, 자치단체보조금 등 37개 통계목
- 목표(상반기) : 23조 1,856억원(신속집행 관리대상액의 61.7%)

구분	예산현액	관리대상액	상반기 목표액
본청·자치구·공기업	84조 5,468억 원	37조 5,285억 원	23조 1,856억 원

- 추진실적('22.5.16.기준) : 14조 8,815억 원(목표 대비 64.2% 집행)
(단위 : 억원)

구분	예산현액	관리대상액	상반기 목표액	집행실적(목표대비)
계	84조 5,468	37조 5,285	23조 1,856	14조 8,815 (64.2%)
본청	47조 616	25조 5,301	16조 4,669	11조 3,051 (68.7%)
자치구	25조 3,460	6조 7,120	3조 7,319	2조 3,694 (63.5%)
공기업	12조 1,392	5조 2,864	2조 9,868	1조 2,070 (40.4%)

□ 추진내용

- 집행관리 강화 및 주요 사업 중점 관리
 - 실·본부·국별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업 실적 관리 및 집행 제고 방안 강구
 - 대규모 투자사업(130개 사업 2조 5,702억 원)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지연 및 반복적 이월 사례 방지
-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독려
 -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·교부금 상반기 65% 이상 교부
 -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한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유 및 부진사업 집행 독려

□ 향후계획

-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: 수시
- 상반기 신속 집행 기관 성과평가 : '22. 7월

2

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 내실화

지방보조금 운영·관리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편성·집행·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

□ 추진방향

- 지방보조금 사업추진 **쏠** 단계에 걸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
-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**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**

□ 추진내용

- **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선 계획 수립, 지침 개정 및 시행('22.3월~)**
 - 지방보조사업 **쏠** 단계별 맞춤형 관리체계 강화
 - ▶ (편성) 집중심의 대상 확대, (관리) 보조사업 책임성 강화, (평가) 자체평가 결과 검증 등
 - 지방보조금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**관리·감독 및 제재 반영**
 - ▶ 실적보고서 검증(3억원 이상) 및 감사보고서 제출(10억원 이상) 의무화, 부정수급자 공표 등
- **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(4~7월) 및 평가 결과의 재정환류(8~9월)**
 - [1차] **실·본부·국 자체평가** : 전액시비 보조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
 - ▶ 평가결과 미흡사업(20%)은 원칙적으로 '23년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
 - [2차] **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** : 3년 초과 계속사업, 자체평가 결과 '미흡' 중 '지속' 의견사업, '보통' 이상 중 부실 우려사업 등 지속여부 평가
 - ▶ 사업 타당성·효과성 등 심의 ⇒ 사업 지속·축소·폐지 여부 결정 ⇒ '23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

□ 향후계획

- '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: '22. 4~7월
- '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심의 : '22. 8~9월
-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」 개정 : '22. 하반기

3

투자·출연기관 채용 관련 규정 정비

市 산하 투자·출연기관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
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

□ 추진개요

- 관련근거 :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, 서울특별시 공정·평등채용 가이드라인('20.1월)
- 목 적 : 산하기관 채용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

〈 채용실태 조사 및 결과 〉

- ◆ 대 상 : 市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◆ 기 간 : 2017년 ~ 계속
- ◆ 조사내용 : 신규 채용(정규직 전환 포함) 과정의 적정성 여부
- ◆ 점검결과 :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대한 채용비리는 없었으며, 일부 규정미비 및 절차미준수 등 지적사항 존재

□ 추진방안 : 채용 관련 규정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정비

- (공기업담당관) 근거규정에 기반하여 채용절차 전반(계획수립 → 공고 → 시험실시 등)에 걸친 『채용관련 규정 체크리스트』 (20개 항목) 마련
 - 채용 관련 내규, 채용 결격사유, 채용계획 통보, 채용공고(기간 등)
 - 시험방법(위원 임명, 외부전문가 참여, 제척·기피·회피, 비밀유지 등)
 - 채용과정 공개, 이의제기 절차 안내, 임직원 친인척 공개
- (투자출연기관) 기관 특성을 반영하되, 체크리스트 사항 규정 반영

□ 향후계획

- 채용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(공기업담당관) : '22.5.17.
- 채용실태 감사실시(공공감사담당관) : '22.5월말~
- 기관별 채용관련 규정 미비사항 정비 : ~'22.8월